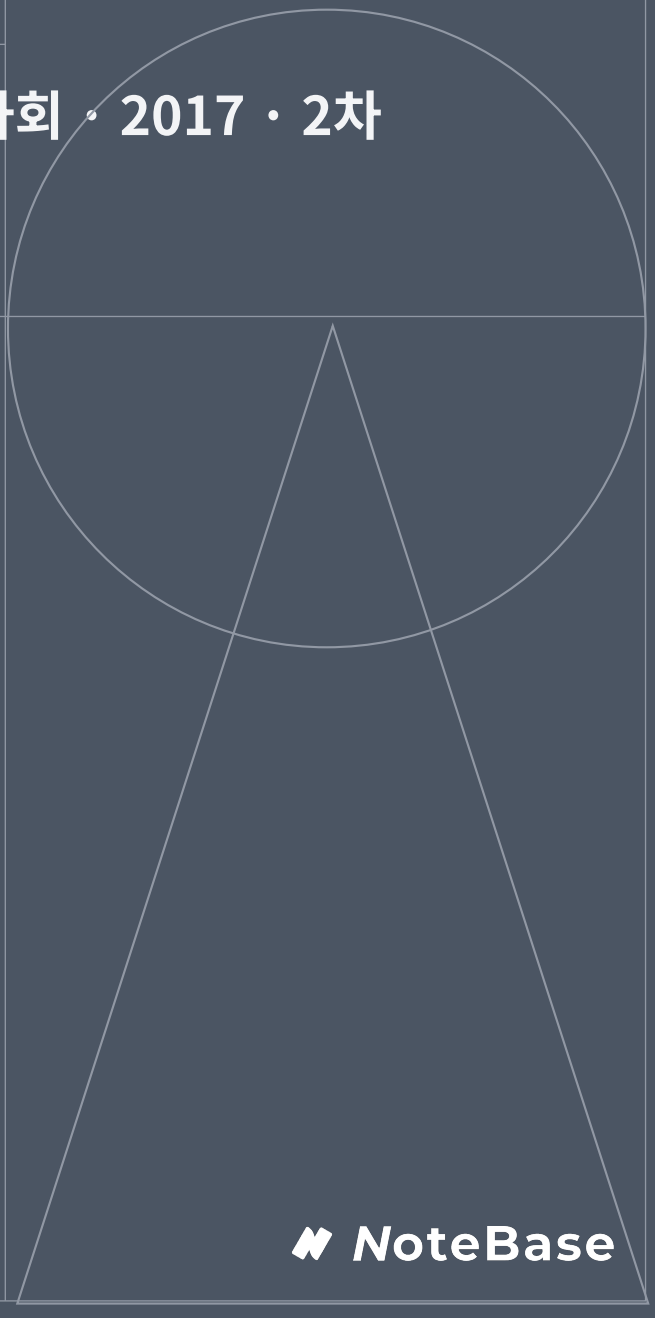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7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7 · 2차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7 · 2차

문 1. 다음은 연인의 대화 장면이다. 이 연인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지문에서 [ ]은 속마음이다.)

甲(여): 오빠, 오늘 우리가 만난 지 1년인데 내가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乙(남): 난 괜찮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甲(여): 그래도, 오늘 1년 기념으로 도서관 앞에서 자장면이라도 먹어요. 시험 끝나고 합격하면 그때는 멋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 먹어요[자장면을 먹는 것에 미안해 함].
乙(남): 좋아. 난 너와 먹는 자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자장면에 담긴 연인의 배려에 고마워함].

① 연인들의 갈등은 성별 대립에 의해 필연적이다.

② 연인들의 의례는 사회 체제나 구조 속에서 수행된다.

③ 연인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로서 전체를 이룬다.

④ 연인들의 행위는 연인들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대화 속 행위자가 상황에 부여한 주관적 의미를 바탕으로 상호 작용하는 장면이 상징적 상호 작용론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람들이 사물이나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해석하고 공유하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이루어 간다고 보는 미시적 관점이다. 이 장면에서 같은 자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甲에게는 미안함을, 乙에게는 연인의 배려와 고마움을 뜻한다.
기능론은 사회를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이 질서와 안정을 이루는 체계로 보고, 갈등론은 희소한 자원과 권력을 둘러싼 불평등과 대립에 주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성별 대립에 의해 필연적이다'가 틀린 표현이다. 갈등론은 집단 간 불평등과 대립에 주목하지만, 이 장면의 연인들은 성별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며 의미를 주고받는다. 올바르게는 '갈등론은 성별을 포함한 집단 간 불평등과 대립의 구조에 주목한다'이다.
② X — '사회 체제나 구조 속에서 수행된다'는 거시적 관점에 가까워 이 장면의 핵심을 설명하지 못한다. 지문은 사회 구조가 아니라 두 사람이 자장면에 부여한 의미를 제시한다. 올바르게는 '연인들의 행위는 상호 작용 과정에서 부여하고 해석한 의미를 바탕으로 수행된다'이다.
③ X —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하나로서 전체를 이룬다'는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는 기능론의 설명이므로 이 장면에 가장 적절한 관점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기능론은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하며 전체의 질서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본다'이다.
④ O — 자장면에 담긴 배려를 乙이 해석하여 고마움을 느끼듯이, 행위의 가치는 행위자들이 부여하고 공유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관점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모두 사회 전체의 체제·구조와 부분 간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는 거시적 기능론의 표현이다. 그러나 지문의 대괄호는 두 사람이 같은 대상에 각기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한다는 점을 직접 보여 주므로 ④를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위자의 속마음, 상황 정의, 의미 부여, 해석, 의사소통이 제시되면 상징적 상호 작용론으로 판단한다. 사회 전체의 질서·통합·상호 의존은 기능론, 불평등·지배·대립은 갈등론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의미와 해석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 질서와 유기적 관계는 기능론, 불평등과 대립은 갈등론이다.

NoteBase

문 2. 다음은 일탈 행동에 대한 甲, 乙의 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 우리 과 선배가 이번 경찰 공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던데, 경찰이 되고 싶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하지 못하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
乙: 내 생각은 좀 달라. 그 선배는 재학 중 시험 볼 때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잖아. 그 뒤에도 교수님이나 친구들이 그 선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그때부터 어쩐지 행동도 불량해지고 자포자기한 듯 보였는데, 결국 이번 시험에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봐.

① 甲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주목한다.
② 甲은 사소한 무질서를 규제하는 구조에 주목한다.
③ 乙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한 부정적 자아 형성에 주목한다.
④ 乙은 사회적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정에 주목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일탈의 원인을 설명하는 아노미 이론, 갈등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낙인 이론, 차별 교제 이론의 핵심 관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甲은 문화적으로 강조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할 합법적 수단 사이의 괴리에서 일탈이 발생한다고 보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한다. 경찰이 되고 싶다는 목표는 있지만 노력해도 합격하기 어렵다고 여겨 부정행위라는 비합법적 수단을 택한 사례이다.
乙은 타인의 부정적 반응과 낙인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2차적 일탈을 유발한다고 보는 낙인 이론에 해당한다. 과거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뒤 주변의 부정적 시선을 받고 행동이 더욱 불량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갈등 이론은 지배 집단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규범을 정하고 적용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주목하고, 깨진 유리창 이론은 사소한 무질서의 방치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고 본다. 차별 교제 이론은 일탈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탈의 기술과 태도를 학습한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주목한다'는 갈등 이론의 관점이다. 甲은 불평등한 구조 자체가 아니라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할 합법적 수단의 괴리에 주목하는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된다.
② X — '사소한 무질서를 규제하는 구조에 주목한다'는 甲의 설명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조기에 통제하는 데 주목한다.
③ O — 乙은 과거 부정행위가 적발된 뒤 교수와 친구들의 부정적 시선을 받고 행동이 불량해져 다시 일탈한 과정을 설명한다. 이는 타인의 낙인이 부정적 자아 형성과 2차적 일탈로 이어진다는 낙인 이론에 부합한다.
④ X — '사회적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정에 주목한다'는 차별 교제 이론의 관점이다. 乙은 타인과의 교제를 통한 일탈 학습이 아니라 주변의 부정적 반응과 낙인이 이후의 일탈을 강화하는 과정에 주목한다.

오답 포인트

乙에게 교수와 친구라는 타인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④의 차별 교제 이론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일탈의 방법과 태도를 '학습'했다는 내용은 없고, 적발 이후의 부정적 시선 때문에 자아와 행동이 달라졌으므로 낙인 이론이다. 또한 甲의 합법적 기회 부족을 곧바로 불평등 구조에 관한 갈등 이론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표와 합법적 수단의 괴리는 아노미 이론, 권력과 불평등한 규범 적용은 갈등 이론, 사소한 무질서의 방치는 깨진 유리창 이론, 타인의 부정적 규정 이후 반복되는 일탈은 낙인 이론, 일탈 집단과의 교제를 통한 학습은 차별 교제 이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목표-수단의 괴리는 아노미, 부정적 시선 뒤 2차적 일탈은 낙인, 교제를 통한 학습은 차별 교제이다.

NoteBase

문 3. 다음은 집단에 대한 동조를 연구한 실험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구자는 ㉠ 甲을 포함한 교통경찰 10명에게 ㉡ 거짓으로 '신호 위반 인지 실험'을 한다고 말하고, 차량신호등이 빨강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자동차가 있는 영상을 공동으로 시청하도록 하였다. ㉢ 甲에게 초록 신호와 빨강 신호 중 어떤 신호일 때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갔는지 고르라고 한다면 빨강 신호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 甲을 제외한 9명 전부가 초록 신호를 선택한다면 甲도 빨강 신호를 선택하지 않고 초록 신호를 선택한다. 사실 아무 것도 모르고 실험에 참가한 ㉤ 甲을 제외하고 다른 교통경찰들은 연구자와 같은 편으로서 초록 신호를 선택하도록 실험 전 언질을 받았다.

① ㉠은 실험 집단이다.

② ㉡, ㉤은 연구 후에 甲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은 독립 변수의 처치이다.

④ ㉣은 종속 변수의 측정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동조 실험에서 실제 연구 대상자와 실험 협조자를 구분하고, 독립 변수의 처치와 종속 변수의 측정 및 연구 종료 후의 사후 설명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립 변수의 처치는 연구자가 원인으로 작용하도록 변화시키는 조건이고, 종속 변수의 측정은 그 조건에 따라 나타난 연구 대상자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다. 기만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연구가 끝난 뒤 실제 연구 목적과 기만한 내용 등을 연구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사후 설명이 필요하다. 이 실험에서는 다른 9명이 초록 신호를 선택하는 상황이 동조 압력을 만드는 처치이고, 그 상황에서 甲이 어떤 신호를 선택하는지가 측정 대상인 반응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의 10명 모두가 실험 집단인 것은 아니다. 甲만 실제로 반응을 관찰하는 연구 대상자이고, 나머지 9명은 연구자와 같은 편인 실험 협조자이다. 틀린 표현은 '㉠은 실험 집단'이며, 올바르게는 '㉠에는 실제 연구 대상자 甲과 실험 협조자 9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이다.
② O — ㉡은 연구 목적을 거짓으로 알린 기만이고, ㉤은 다른 9명이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사실이다. 두 내용 모두 甲이 알지 못한 채 실험에 참여하도록 만든 핵심 정보이므로 연구 후 사후 설명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X — ㉢은 甲에게 신호를 선택하게 하여 그의 반응을 확인하는 부분이지 독립 변수의 처치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독립 변수의 처치'이며, 올바르게는 '甲의 선택이라는 종속 변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④ X — ㉣은 다른 9명이 모두 초록 신호를 선택하도록 하여 집단의 일치된 압력을 조성하는 부분이지 종속 변수의 측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종속 변수의 측정'이며, 올바르게는 '甲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한 독립 변수의 처치'이다.

오답 포인트

㉢의 질문 행위와 ㉣의 집단 반응을 각각 처치와 측정으로 뒤바꾸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다른 9명이 초록 신호를 고르는 조건이 원인에 해당하고, 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甲의 선택이 결과에 해당한다. 또한 실험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자와 공모한 9명까지 실제 연구 대상자로 보면 ①을 잘못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바꾼 조건은 독립 변수의 처치로, 그 조건 아래에서 관찰한 대상자의 반응은 종속 변수의 측정으로 구분한다. 연구 목적이나 협조자의 존재를 숨긴 실험에서는 종료 후 사후 설명의 대상이 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9명의 일치된 오답은 처치, 甲의 선택은 측정, 숨긴 목적과 협조자는 사후 설명 사항이다.

NoteBase

문 4.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고등학교에서 비행으로 힘든 시기도 보냈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다. 그 후 그는 ㉠ 청소년 상담 시설에 근무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 상담학과에 진학했지만, 상담보다는 학교 폭력 예방에 흥미와 적성이 있어 졸업 후 시험을 통해 ㉢ 학교전담경찰이 되었다. 학교전담경찰이 된 甲은 유능함과 충실함으로 ㉣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① ㉠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甲의 준거 집단이다.

③ ㉢은 甲의 성취 지위이다.

④ ㉣은 甲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사회화 기관, 준거 집단, 성취 지위,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과 제재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1차적 사회화 기관은 가족처럼 친밀한 대면 관계 속에서 기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2차적 사회화 기관은 학교·직장 등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능, 사회적 역할을 학습하게 하는 기관이다.
준거 집단은 개인이 가치 판단이나 행동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며, 소속 집단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성취 지위는 개인의 노력이나 선택으로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이다.
역할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보상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가하는 불이익은 제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청소년 상담 시설은 가족과 같은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기초적 사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문적·공식적으로 사회화를 돕는 2차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② X — '준거 집단'이라는 표현이 틀렸다. 상담학과는 재학 당시 甲의 소속 집단이었지만, 甲이 가치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③ O — 학교전담경찰은 졸업 후 시험을 거쳐 개인의 노력으로 획득한 지위이므로 성취 지위이다.
④ X — '제재'라는 표현이 틀렸다. 유능함과 충실함을 인정받은 것은 역할 행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이므로 제재가 아니라 보상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에서는 실제로 소속했던 집단을 곧바로 준거 집단으로 판단하기 쉽고, ④에서는 역할 행동에 대한 모든 평가를 제재로 묶기 쉽다. 소속 여부와 판단 기준 여부를 구분하고, 긍정적 평가는 보상, 부정적 불이익은 제재로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관은 친밀한 기초 사회화인지 전문적·공식적 사회화인지, 집단은 실제 소속 여부와 판단 기준 여부가 같은지, 지위는 태어날 때 주어졌는지 노력으로 얻었는지, 역할 평가는 긍정적 보상인지 부정적 제재인지 순서대로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가족은 1차, 전문 기관은 2차, 판단의 기준은 준거 집단, 노력으로 얻으면 성취 지위, 인정은 보상이다.

NoteBase

문 5.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골드 러시'라고 불리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였던 1853년, 한 독일 출신 청년이 광부들의 작업복이 쉽게 찢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 텐트용으로 생산된 두꺼운 천으로 바지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것이 청바지이다. 이후 ㉡ 우리나라는 미군들에 의해 청바지가 6·25 전쟁 때 소개되어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최근에는 ㉢ 한복과 우리 체형을 적용한 새로운 청바지가 개발되어 사람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제는 대중 패션이 된 ㉣ 청바지는 패션뿐만 아니라 음악, 디자인 등과 연계되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① ㉠은 문화 요소 중 기술에 해당된다.

② ㉡은 직접 전파를 통해 전해진 물질 문화에 해당된다.

③ ㉢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결합한 문화 융합에 해당된다.

④ ㉣은 문화의 속성 중 학습성에 해당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문화 요소의 분류, 문화 변동의 양상, 문화의 속성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술은 인간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물이나 재료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지식과 방법이다.
직접 전파는 서로 다른 사회의 구성원이 직접 접촉하여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현상이고, 물질 문화는 의복·도구처럼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문화이다.
문화 융합은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기존 문화와 구별되는 새로운 문화 형태가 나타나는 현상이다.
문화의 학습성은 문화를 후천적으로 배우는 성질이고, 전체성은 문화의 여러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 부분의 변화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 성질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텐트용 천을 작업복에 맞게 가공하여 쉽게 찢어지는 문제를 해결한 것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에 해당한다.
② O — 미군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청바지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으므로 직접 전파이고, 청바지는 형태를 지닌 의복이므로 물질 문화이다.
③ O — 서양의 청바지에 한복과 한국인의 체형이라는 서로 다른 문화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청바지를 만들었으므로 문화 융합에 해당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학습성'이다. 패션인 청바지가 음악·디자인 등 다른 문화 요소와 유기적 관계를 맺는 모습은 문화의 여러 부분이 상호 연관된 '전체성'을 보여 준다. 올바르게는 '㉣은 문화의 속성 중 전체성에 해당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대중 패션이 되었다'는 표현만 보면 사람들이 청바지 문화를 배웠다는 학습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밑줄의 판단 근거는 음악·디자인 등과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는 부분이므로 전체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후천적으로 배운다'는 학습성, '세대 간 전달된다'는 공유성·축적성,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변동성, '여러 문화 요소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전체성으로 핵심 표현을 대응시킨다. 문화 접촉에서는 전달 경로와 결합 뒤 새로운 문화가 생겼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유기적 관계는 전체성, 후천적 습득은 학습성이다. 직접 접촉은 직접 전파이고, 서로 다른 문화의 결합으로 새 문화가 생기면 문화 융합이다.

NoteBase

문 6. 다음 甲~丙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丙은 '사회 보험', '사회 서비스', '공공 부조' 중 각각 하나에만 해당되고, 아래 내용 이외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甲(67세)은 회사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 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최저 생계비 이하의 재산과 소득이 있음.
乙(46세)은 회사 업무 중 사고로 인해 치료와 자활을 하고 있음.
丙(32세)은 임용된 지 5년차 경찰관으로 발달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

① 甲, 乙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甲, 乙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③ 乙, 丙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乙, 丙은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사례의 생활 위험과 지원 방식을 근거로 사회 보험·공공 부조·사회 서비스를 구분하고, 각 제도의 특징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甲: 소득과 재산이 최저 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乙: 업무상 사고에 따른 치료와 재활이므로 산업 재해를 보장하는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丙: 발달 장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돌봄·재활 등의 사회 서비스에 해당한다.

핵심 개념

사회 보험은 보험료를 바탕으로 질병·산업 재해·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공공 부조는 생활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회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돌봄·재활 등 비금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능력 향상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적용 기준

빈곤으로 최저 생활 보장이 필요하면 공공 부조, 보험 가입자가 사회적 위험을 당하면 사회 보험,
돌봄·상담·재활과 같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면 사회 서비스로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乙의 사회 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甲의 공공 부조는 강제 가입 방식의 제도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甲, 乙은 강제 가입'은 '乙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甲의 공공 부조는 조세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乙의 사회 보험도 보험료와 급여의 구조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③ X — 丙의 사회 서비스는 상담·돌봄·재활 등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틀린 표현인 '乙, 丙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乙은 금전적 급여를 중심으로 할 수 있으나, 丙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은 丙에게 적용되는 사회 서비스의 목적이며, 乙의 사회 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 발생한 소득 상실이나 생활 불안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틀린 표현인 '乙, 丙은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丙은 역량 개발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乙의 사례에 '치료와 자활'이 제시되어 사회 서비스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회사 업무 중 사고'는 산업 재해라는 보험 사고이므로 乙은 사회 보험이다. 또한 공공 부조는 수급자를 가입시키는 제도가 아니며, 사회 서비스는 현금보다 비금전적 지원이 중심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에서 빈곤·최저 생활은 공공 부조, 보험료·사회적 위험은 사회 보험, 돌봄·상담·재활은 사회 서비스로 먼저 분류한 뒤 강제 가입 여부, 지원 형태, 목적을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빈곤은 공공 부조, 사회적 위험은 사회 보험, 돌봄과 재활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이다.

NoteBase

문 7. 다음 표는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국	乙국
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실권을 갖고 행정부를 구성한다.	의회 내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행정부 수반이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다.

① 甲국은 乙국과는 달리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② 甲국은 乙국과는 달리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어 정책의 계속성 확보가 용이하다.

③ 乙국은 甲국과는 달리 권력의 분리보다 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④ 乙국은 甲국과는 달리 의회가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표의 甲국은 대통령제, 乙국은 의원내각제이다. 두 정부 형태를 권력 분립·융합, 임기 보장,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통령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독립하는 정부 형태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고 권력 분립이 강조된다.
의원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존속하는 정부 형태이다. 권력 융합이 강조되며,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행정부의 의회 해산권이 대응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甲국의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는 부분이 틀리다. 甲국은 대통령제이므로 전형적으로 행정부의 의회 해산권이 없다. 올바르게는 의원내각제인 乙국의 행정부가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② O — 대통령제인 甲국에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므로 의원내각제보다 정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쉽다.
③ O — 의원내각제인 乙국은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므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리보다 권력 융합에 중점을 둔다.
④ O — 의원내각제인 乙국에서는 내각이 의회의 신임을 바탕으로 존속하므로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두 제도의 견제 수단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의회 해산권은 의원내각제의 행정부에, 내각 불신임권은 의원내각제의 의회에 대응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민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고 임기가 보장되면 대통령제로,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불신임권과 해산권이 나타나면 의원내각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대통령제는 분립·고정 임기, 의원내각제는 융합·불신임권·해산권이다.

NoteBase

문 8. 다음은 평등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것을 고려하여 헌법상 기본권 내용과 조항이 옳은 것은?

평등은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있다. 형식적 평등은 개인에게 주어진 선천적·후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실질적 평등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① 모든 국민은 출신지를 고려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제14조).

② 모든 국민은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제15조).

③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23조 제1항).

④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 제1항).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조문 내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각 기본권에 헌법이 직접 붙인 조건을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형식적 평등은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고, 실질적 평등은 능력이나 상황의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핵심 구분

헌법 제14조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별도의 조건 없이 보장한다.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므로, 능력이라는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평등이 드러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7 · 2차

선지별 해설

① X
헌법 제14조는 출신지를 조건으로 두지 않고 모든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
틀린 표현: 출신지를 고려하여
올바른 표현: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② X
헌법 제15조는 흥미와 적성에 따른다는 조건 없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틀린 표현: 흥미와 적성에 따라
올바른 표현: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③ O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조문 내용과 조항이 모두 일치한다.

④ X
헌법 제31조 제1항은 단순히 균등한 교육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빠진 표현: 능력에 따라
올바른 표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일상적으로 그럴듯한 기준인 출신지, 흥미·적성을 헌법 조문에 임의로 덧붙인 선지이다. ④는 제31조 제1항의 핵심 문구인 '능력에 따라'를 빼서 형식적 평등처럼 보이게 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권 조문 문제에서는 기본권의 이름만 맞는지 보지 않고 주체, 조건, 법률유보 문구까지 대조한다. 제14조와 제15조에는 별도 조건이 없고, 제23조 제1항에는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1조 제1항에는 '능력에 따라'가 들어간다.

암기 포인트

14조 거주·이전, 15조 직업선택, 23조 재산권의 내용·한계는 법률, 31조 능력에 따른 균등교육이다.

NoteBase

문 9. 다음 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종류 및 해당 심판의 청구권자를 분류한 것이다. (가)~(라)의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권한 쟁의 심판은 (가)~(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권자 / 심판 종류	국회	정부	법원	국민
(가)	○			
(나)		○		
(다)			○	
(라)				○

① (가)의 대상은 대통령도 포함되나, 결과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나)의 경우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 제소된다.

③ (다)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제청된다.

④ (라)는 권리 구제형과 위헌 심사형으로 구분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청구권자를 기준으로 헌법재판의 종류를 구별하고, 각 심판의 대상·요건·효과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주체를 연결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탄핵심판은 고위 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고,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의 구제 또는 법률의 위헌 심사를 구하는 심판이다.

핵심 구분

표에서 국회가 청구하는 (가)는 탄핵심판, 정부가 청구하는 (나)는 정당해산심판, 법원이 제청하는 (다)는 위헌법률심판, 국민이 청구하는 (라)는 헌법소원심판이다. 헌법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탄핵결정의 효과는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치며, 그 결정으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를 직접 다투는 권리구제형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청구하는 위헌심사형으로 나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가)는 탄핵심판이며 대통령도 탄핵소추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효과만 가지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결과에 따라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올바른 표현: '탄핵결정으로도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② O — (나)는 정부가 청구하는 정당해산심판이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③ O — (다)는 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심판이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구체적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④ O — (라)는 국민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이다. 헌법재판소법상 공권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권리구제형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가 청구하는 위헌심사형으로 구분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표현이 함정이다. 탄핵심판은 공직 유지 여부를 다루는 헌법상 책임 절차이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은 별개의 절차에서 판단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청구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국회는 탄핵심판, 정부는 정당해산심판,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국민은 헌법소원심판으로 연결한 뒤 각 심판의 요건과 효과를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국회-탄핵, 정부-정당해산, 법원-위헌법률, 국민-헌법소원이며, 탄핵은 파면일 뿐 민사·형사책임 면제가 아니다.

NoteBase

문 10. 다음 甲~丙은 대표적인 근대 정치 사상가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홉스, 로크, 루소 중 각각 하나이다.)

甲: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선하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지만, 사적 소유로 인해 불평등이 조성되었다.
乙: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백지와 같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재판관이 없고, 법을 집행하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어서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丙: 인간의 본성은 본래부터 악하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무정부 상태이다.

① 甲은 일반의지를 통하여 공공의 선과 이익을 추구하였다.

② 乙은 국가 권력의 2권 분립과 저항권을 주장하였다.

③ 丙은 사회 계약의 동기는 개인의 자기 보존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甲, 乙, 丙 모두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자연 상태와 인간 본성에 관한 설명을 바탕으로 루소·로크·홉스를 식별하고, 각 사상가의 사회 계약론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甲 루소: 인간은 본래 선하고 자유롭지만 사적 소유의 등장으로 불평등이 생겼으며, 일반의지에 기초한 공동체가 공공선을 실현한다고 본다.
乙 로크: 인간의 마음은 백지와 같으며, 자연 상태에는 공통의 재판관과 법 집행 권력이 없어 권리 보장이 불안정하므로 정부가 필요하다고 본다.
丙 홉스: 인간의 이기적 욕망 때문에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되며, 자기 보존을 위해 사회 계약과 강력한 주권 권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甲은 루소이다. 루소는 시민 전체의 일반의지가 사익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공공의 선과 공동의 이익을 지향한다고 보았다.
② O. 乙은 로크이다.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하였고, 정부가 생명·자유·재산이라는 자연권을 침해하면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O. 丙은 홉스이다. 홉스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기 보존의 욕구를 사회 계약의 핵심 동기로 보았다.
④ X. 틀린 표현은 '국가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세 사상가는 모두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 또는 정치 공동체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국가는 개인의 안전·권리·자유 또는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 올바르게는 '甲, 乙, 丙 모두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사회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취한다'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③은 각 사상가의 대표 키워드를 정확히 연결한 선지이다. ④는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사회 계약론에서 국가를 그 자체의 목적으로 바꾸어 놓은 표현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한 본성·사적 소유·일반의지'는 루소, '백지·자연권·권력 분립·저항권'은 로크, '악한 본성·만인의 투쟁·자기 보존·강력한 주권'은 홉스로 연결한다. 이어 사회 계약으로 만든 국가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루소는 일반의지, 로크는 자연권과 저항권, 홉스는 자기 보존과 만인의 투쟁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법이 적용된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민법, 형법, 사회법 중의 하나와 관련된 설명이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는 근본적으로 모든 경제 활동을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경제 활동의 당사자들이 모두 평등하다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불평등을 교정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②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의 최저 수준을 보장한다.

④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을 지급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사적 자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법의 적용 사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노동법·경제법·사회 보장법과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의 구조 제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사회법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 국가가 사적 자치에 개입하는 법 영역이다. 대표적으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이 포함된다.

핵심 구분

소비자 보호는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경제법의 사례이고,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 보장은 노동법의 사례이며, 국민연금은 사회 보장법의 사례이다. 반면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의 구조 제도로서 이 문항이 묻는 사회법의 적용 사례가 아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경찰/공채(순경) · 사회 · 2017 · 2차

선지별 해설

① O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보완하는 경제법의 사례이므로 사회법에 해당한다.

② X
국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적 구조 제도이므로 사회법의 적용 사례로 보기 어렵다.
틀린 표현: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사회법이 적용된 사례로 보는 부분
올바른 표현: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은 형사법과 관련된 범죄 피해자 보호·구조의 사례이다.

③ O
근로 조건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평등을 국가가 조정하는 노동법의 전형적인 사례이므로 사회법에 해당한다.

④ O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법의 사례이므로 사회법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②도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사회법처럼 보이기 쉽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한다는 사실만으로 사회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피해의 구조인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보호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로자·소비자·사회 보장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사적 자치의 불평등을 보완하면 사회법으로 판단한다. 범죄와 형벌 또는 범죄 피해자 구조가 중심이면 형사법 관련 제도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법의 세 축은 노동법·경제법·사회 보장법이다. 소비자 보호, 근로 조건 보장, 국민연금은 사회법이고 범죄 피해자 구조는 구별한다.

NoteBase

문 12. 다음 사례에서 민법에 따라 乙과 丙이 받을 법정 상속분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 중에 낳은 딸 丙이 있다. 丙은 3년 전에 결혼하였고, 아들 丁이 있다. 甲이 해외로 출장을 가던 중에 비행기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유언장이 없는 상황에서 甲은 채무 없이 동산과 부동산을 합하여 30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

① 乙: 24억 원, 丙: 6억 원

② 乙: 20억 원, 丙: 10억 원

③ 乙: 18억 원, 丙: 12억 원

④ 乙: 15억 원, 丙: 15억 원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할 때의 법정상속분을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한다는 점이다.

용어 풀이

법정상속분은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각 상속인이 받는 몫이다.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본인으로부터 아래 세대로 이어지는 혈족이다.

사례 정리

甲의 배우자는 乙이고, 딸 丙은 甲의 직계비속이다. 丙이 살아 있으므로 丙의 아들 丁은 丙을 대신하여 상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乙과 丙이다.

핵심 구분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 乙은 직계비속 丙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직계비속의 몫을 1로 보면 배우자의 몫은 1.5이므로 비율은 乙:丙=1.5:1이다. 총비율은 2.5이고, 30억 원의 $\frac{1.5}{2.5}$은 18억 원, $\frac{1}{2.5}$은 12억 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乙 24억 원, 丙 6억 원은 4:1의 배분으로 법정 비율 1.5:1과 다르다. 틀린 표현: '乙 24억 원, 丙 6억 원' → 올바른 표현: '乙 18억 원, 丙 12억 원'이다.
② X — 乙 20억 원, 丙 10억 원은 2:1의 배분으로 배우자에게 필요한 50% 가산을 초과한다. 틀린 표현: '乙 20억 원, 丙 10억 원' → 올바른 표현: '乙 18억 원, 丙 12억 원'이다.
③ O — 배우자 乙과 딸 丙의 법정상속 비율 1.5:1을 30억 원에 적용하면 각각 18억 원과 12억 원이 된다.
④ X — 乙 15억 원, 丙 15억 원은 배우자와 자녀를 균등하게 나눈 결과이므로 배우자의 50% 가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틀린 표현: '乙 15억 원, 丙 15억 원' → 올바른 표현: '乙 18억 원, 丙 12억 원'이다.

오답 포인트

丙에게 아들 丁이 있다는 사실에 끌려 丁까지 상속인 수에 넣거나, 배우자와 자녀의 몫을 단순히 반씩 나누기 쉽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그 자녀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몫에는 자녀 몫의 50%가 가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 공동상속인을 확정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상속하면 각 직계비속을 1, 배우자를 1.5로 두어 총재산을 비례 배분한다. 손자녀는 그 부모인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는 등 대습상속 요건이 있을 때만 그 자리를 대신한다.

암기 포인트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하면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은 2017년보다 약 16.4% 정도 인상되었다.

① 인건비 부담의 증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다.

② 저소득층의 구매력 증가로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③ 주유소나 마트에서 무인결제시스템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④ 노동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노동 수요, 근로자의 노동 공급, 고용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기업의 노동 수요량은 감소하고 근로자의 노동 공급량은 증가하므로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 초과 공급은 일하려는 사람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실업 증가 압력으로 이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임금 비용이 증가하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② O — 고용이 유지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과 구매력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 경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 O —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은 노동을 무인결제시스템과 같은 자본으로 대체할 유인이 커지므로 자동화 도입이 빨라질 수 있다.
④ X — 틀린 표현은 '노동시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실업률이 감소'한다는 부분이다.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아지면 노동 수요량은 줄고 노동 공급량은 늘어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며, 실업은 증가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④는 최저임금 인상 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방향을 반대로 제시한 선지이다. 임금 상승은 기업에는 노동 수요를 줄이는 요인이고 근로자에게는 노동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임금 상승 → 노동 수요량 감소·노동 공급량 증가 → 노동의 초과 공급 → 실업 증가'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높은 최저임금은 노동의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공급을 만든다.

NoteBase

문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아래 내용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은 없다고 가정한다.)

X재(정상재)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선호)가 감소하였다. X재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였다.

① 소비자의 X재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② 생산자의 X재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③ X재의 대체재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④ 향후 X재의 시장 가격은 예측할 수 없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때 수요량·공급량이 아니라 수요곡선·공급곡선의 이동과 균형 가격·거래량의 변화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소비자의 X재 선호 감소는 X재의 수요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생산비를 높여 X재의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두 변화 모두 균형 거래량을 감소시키지만, 수요 감소는 균형 가격을 낮추고 공급 감소는 균형 가격을 높이므로 가격의 최종 방향은 알 수 없다. X재가 정상재라는 조건은 소득 변화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핵심 개념

수요 감소는 각 가격에서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양이 줄어 수요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공급 감소는 각 가격에서 생산자가 팔고자 하는 양이 줄어 공급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대체재 수요의 변화 방향을 X재의 가격 변화로 판단하려면 먼저 X재 가격의 변화 방향이 확정되어야 한다.

적용 기준

수요곡선의 좌측 이동은 가격 하락·거래량 감소 압력을, 공급곡선의 좌측 이동은 가격 상승·거래량 감소 압력을 만든다. 같은 방향의 효과가 겹치는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반대 방향의 효과가 맞서는 가격은 두 이동의 크기를 알 수 없으면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X재 가격에 연동되는 대체재 수요도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X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감소하면 각 가격에서 X재를 구매하려는 양이 줄어 X재 수요가 감소한다.
② O —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생산비를 높이므로 각 가격에서 생산자가 공급하려는 양이 줄어 X재 공급이 감소한다.
③ X — ‘X재의 대체재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라는 단정이 틀렸다. X재 가격은 수요 감소의 하락 압력과 공급 감소의 상승 압력을 동시에 받아 방향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X재 가격과 연동되는 대체재 수요의 방향도 확정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주어진 정보만으로 X재의 대체재 수요 변화 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이다.
④ O — 수요 감소는 X재의 균형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고 공급 감소는 높이는 요인이므로, 두 변화의 상대적 크기가 제시되지 않으면 향후 시장 가격은 예측할 수 없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 X재 수요가 감소했다는 사실만 보고 X재 가격 하락과 대체재 수요 감소를 연달아 확정하기 쉽다. 그러나 공급도 함께 감소하므로 X재 가격의 최종 방향부터 불확정이다. 또한 ‘X재에 대한 선호 감소’만으로 소비자의 선호가 반드시 특정 대체재로 이동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사건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 어느 곡선을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는지 나눈다. 그다음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방향을 각각 표시하고, 효과가 같으면 방향을 확정하며 효과가 반대이면 이동 폭이 없는 한 예측 불가로 판단한다. 관련재의 수요는 기준 재화의 가격 방향이 확정되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면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불확정이다. 가격이 불확정이면 그 가격에 연동되는 대체재 수요도 단정할 수 없다.

NoteBase

문 15. A제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고, B제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총판매 수입의 변화에 대한 예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였다.
B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지급되던 정부보조금이 삭감되었다.

① A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B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② A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B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③ A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B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④ A제품의 총판매 수입 감소, B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공급 변화가 균형가격을 바꿀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라 총판매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A제품: 원재료 가격 하락 → 생산비 감소 → 공급 증가 → 균형가격 하락·균형거래량 증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B제품: 정부보조금 삭감 → 생산비 부담 증가 → 공급 감소 → 균형가격 상승·균형거래량 감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사용할 공식

총판매 수입은 $TR = P \times Q$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과 총판매 수입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과 총판매 수입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는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수량의 변동률이 가격의 변동률보다 작고, 탄력적 수요에서는 수량의 변동률이 가격의 변동률보다 크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A제품은 공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판매량 증가 효과보다 가격 하락 효과가 커서 총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2. B제품은 공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다. 수요가 탄력적이므로 가격 상승 효과보다 판매량 감소 효과가 커서 총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3. 따라서 A제품과 B제품의 총판매 수입은 모두 감소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A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가 틀리다. A제품은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총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A제품 감소, B제품 감소’이다.
② O — A제품은 비탄력적 수요에서 가격이 하락하므로 총판매 수입이 감소하고, B제품은 탄력적 수요에서 가격이 상승하므로 총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③ X — A제품과 B제품의 총판매 수입이 모두 증가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두 제품 모두 감소한다.
④ X — ‘B제품의 총판매 수입 증가’가 틀리다. B제품은 가격이 상승하고 수요가 탄력적이므로 판매량 감소 효과가 더 커 총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올바르게는 ‘A제품 감소, B제품 감소’이다.

오답 포인트

원재료 가격 하락과 보조금 삭감은 수요가 아니라 공급을 변화시킨다. 먼저 공급 변화로 가격의 방향을 찾은 뒤, 탄력성이 1보다 작은지 큰지에 따라 총판매 수입의 방향을 판단해야 한다. 특히 ‘공급 증가로 판매량이 늘면 수입도 증가한다’고 단정하면 A제품을 잘못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공급 요인의 변화 → 균형가격의 방향 → 수요의 탄력성 순서로 판단한다. 가격이 하락할 때 비탄력적 수요이면 총판매 수입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할 때 탄력적 수요이면 총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암기 포인트

비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과 총수입이 같은 방향이고, 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과 총수입이 반대 방향이다.

NoteBase

문 16. 채권과 주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희석증권은 제외한다.)

① 주식 보유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채권 보유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② 채권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 참가권을 가진다.

③ 채권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는 모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 수익 형태, 경영 참가권, 발행 주체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주식은 주식회사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의결권을 통해 원칙적으로 경영에 참가할 수 있다.
채권은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이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무 증권으로, 채권자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경영 참가권은 없다.
주식과 채권은 모두 시장에서 거래될 때 가격 변동에 따른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주식 보유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채권 보유자는 약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채권 보유자와 주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 참가권을 가진다'이다. 주식 보유자는 의결권을 통해 원칙적으로 경영에 참가할 수 있지만, 채권 보유자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경영 참가권이 없다. 올바르게는 '주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 참가권을 가지지만, 채권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경영 참가권을 가지지 않는다'이다.
③ O — 주식뿐 아니라 채권도 시장가격이 변동하므로 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④ O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며, 필요한 자금은 국채나 지방채와 같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주식과 채권이 모두 투자 증권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경영 참가권도 공통으로 가진다고 착각하게 한다. 경영 참가권은 소유 지분인 주식에 연결되고, 채권은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나타낸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유 관계이면 주식, 채권·채무 관계이면 채권으로 구분한다. 배당과 의결권은 주식, 이자와 원금 상환청구권은 채권에 대응시키면 된다. 시세 차익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채권 모두에서 가능하다.

암기 포인트

주식은 지분·배당·의결권, 채권은 빚·이자·원금 상환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국내총생산(GDP)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내총생산은 여가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② 국내총생산은 심리적인 편익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국내총생산으로 소득 분배의 상태를 알 수 없다.

④ 국내총생산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도 포함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이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후생을 완전하게 보여 주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내총생산은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한 지표이다. 시장가격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여가와 심리적 만족, 소득 분배 상태, 시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 등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국민의 후생을 완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여가는 시장에서 거래되어 가격이 매겨지는 생산물이 아니므로 그 가치는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② O — 행복감이나 심리적 만족과 같은 비시장적 편익은 시장가격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GDP에 반영되지 않는다.
③ O — GDP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총가치를 나타낼 뿐, 그 소득이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는 보여 주지 못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도 포함한다'이다. GDP는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포함하며, 가사노동처럼 시장 밖에서 생산되어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대체로 포함하지 않는다.

오답 포인트

④의 '포함한다'가 함정이다. 시장 밖 생산도 실제 가치를 만들 수 있지만, GDP는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계산하므로 그러한 가치를 대체로 포착하지 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DP의 한계를 묻는 선지에서는 시장가격으로 측정되는 생산인지부터 판단한다. 여가·심리적 만족·소득 분배·시장 밖 생산은 GDP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 항목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GDP는 시장생산의 크기를 나타내지만, 여가·행복·분배·비시장 생산까지 보여 주는 완전한 후생 지표는 아니다.

NoteBase

문 18. 다음 우리나라 조세 중에서 보유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① 법인세

② 상속세

③ 재산세

④ 개별소비세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소득·재산 이전·재산 보유·소비 중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조세의 성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유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조세이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보유에 부과되므로 보유세에 해당한다. 반면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 상속세는 사망에 따른 재산의 이전,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등의 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성격의 조세이므로 보유세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법인세'이며, 올바르게는 '재산세'이다.
② X —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 이전될 때 부과하는 재산 이전세이므로 보유세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상속세'이며, 올바르게는 '재산세'이다.
③ O —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정한 재산을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보유세 성격을 가진다.
④ X —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구입이나 특정 장소의 이용 등 소비 행위에 부과하는 소비세이므로 보유세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개별소비세'이며, 올바르게는 '재산세'이다.

오답 포인트

상속세도 재산과 관련되므로 보유세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상속세는 재산을 계속 보유하는 사실이 아니라 사망에 따른 재산의 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목의 이름보다 과세 원인을 확인한다. 소유 자체에 반복적으로 부과되면 보유세, 소득 발생에 부과되면 소득세, 재산 이전에 부과되면 이전세, 소비 행위에 부과되면 소비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산세는 보유, 상속세는 이전, 법인세는 소득, 개별소비세는 소비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소득 분배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니 계수는 클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② 10분위 분배율은 1에서 10의 값을 가지고 클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③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점유율을 하위 20%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④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 소득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소득 분배의 평등도와 빈곤을 측정하는 지니 계수, 10분위 분배율,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의 정의와 수치 방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완전 평등선 사이의 면적을 이용한 불평등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클수록 평등하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클수록 불평등하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상대적 빈곤선보다 낮은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지니 계수는 클수록 평등하다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지니 계수가 작을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 클수록 불평등하다.

② X
10분위 분배율이 1에서 10의 값을 가진다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하위 40% 소득점유율을 상위 20% 소득점유율로 나누며, 이론상 0에서 2 사이의 값을 가지고 클수록 평등하다.

③ O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가 커질수록 이 값도 커진다.

④ X
상대적 빈곤의 기준을 단순히 중위소득 미만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한 상대적 빈곤선 미만인 계층의 비율이며, 통상 중위소득의 50%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지표값의 방향이 반대이다. 지니 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은 클수록 불평등하지만, 10분위 분배율은 분자가 저소득층의 몫이므로 클수록 평등하다. ④의 '중위소득 미만'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한 빈곤선 미만'보다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자와 분모가 누구의 소득인지 먼저 확인한다. 상위층 소득을 하위층 소득으로 나눈 지표는 클수록 불평등하고, 하위층 소득을 상위층 소득으로 나눈 지표는 클수록 평등하다. 빈곤율은 중위소득 자체가 아니라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한 빈곤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니·5분위 배율은 클수록 불평등,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평등이다.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다.

NoteBase

문 20. 경기변동에 따른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기 과열 시 세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② 경기 과열 시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여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③ 경기 침체 시 국공채를 매입하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④ 경기 침체 시 정부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경기 과열에는 총수요를 줄이는 긴축 정책을, 경기 침체에는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 정책을 사용하는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정 정책은 정부지출과 조세를 조절하여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정부지출 증가·세율 인하는 총수요를 늘리고, 정부지출 감소·세율 인상은 총수요를 줄인다.
통화 정책은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여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지급준비율 인상·국공채 매각은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이고, 지급준비율 인하·국공채 매입은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 정책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경기 과열 시 세율을 인상하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과 소비가 감소하므로 총수요가 줄어든다.
② O — 경기 과열 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축소되어 통화량과 총수요가 감소한다.
③ O — 경기 침체 시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고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와 총수요가 증가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정부지출을 줄여 총수요를 증가시킨다'이다. 정부지출 감소는 총수요를 감소시키므로 경기 침체를 심화할 수 있다. 올바르게는 '경기 침체 시 정부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증가시킨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경기 침체'와 '총수요 증가'라는 확장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수단만 '정부지출 감소'로 바꾸었다.
정부지출은 총수요의 구성 요소이므로 감소하면 총수요도 감소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과열이면 긴축, 침체이면 확장으로 방향을 정한다. 그다음 정부지출·통화량을 늘리는 수단은 총수요 증가, 줄이는 수단은 총수요 감소와 연결한다. 세율과 지급준비율은 인상할수록 총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과열은 세율·지급준비율 인상, 침체는 정부지출 확대·국공채 매입이다.

NoteBase